

정부의 건축설계 정책과 우획의 할 일

Government Policies on Architectural Design and Our Duties

새해 들어 정가는 지자체 선거 열풍과 함께 2년이나 남은 대선 경쟁에서도 물망에 오른 분들의 부침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초전인 당의장 후보 순위선거에서 상호 인신공격도 불사하는 난타전 끝에 예상한대로 1, 2위가 결정되는가 하면, 야권과 재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1위 자리를 굳세게 질주하던 재야의 모 후보가 청계천 복원공사의 완료와 더불어 그 지자체의 수장이 오차 범위까지 수직상승하자 여권후보와 합종연횡을 하는 듯하다. 건축물 하나가 도시나 국가의 이미지를 통째로 바꾸듯이 서울 도심의 환경을 바꾸게 된 청계천의 부활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질 대통령 후보군의 인기순위를 한순간에 뒤집는 경천동지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작년도 한국건축계를 돌아볼 때 현상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제일 큰 관심을 끈 것은, 신행정수도안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논외로 할 경우 단연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의 국제공모전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한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 그 젓줄인 한강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로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그 도시는 물론 국가적 상징이 되길 원하는 염원에서였겠지만 건축사들은 그 외에도 UIA의 현상경지지침을 준수하여 국제공모를 하고 그에 의한 당선작들을 선정한 것에 또 하나의 평점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1차에 당선작을 5점 선정한 후 지명작가 3명과 함께 이를 각 건설사와 합작하여 턴키방식으로 최종작을 선정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의해, 최종 당선작이 작품이 아닌 건설사의 공사비 등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러한 예는 서울시청사의 증축공사에서도 똑같이 자행되었다. 결국 국제건축가연맹은 유례가 없는 이러한 행위에 다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현상설계에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혀 대한민국 전체를 문화후진국, 건축후진국으로 만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계천이 전 세계 대도시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상기한대로 한국의 건축설계시장은 정부에 의해 크게 왜곡되어 있다.

첫째는 턴키방식이다.

정부는 설계와 공사비, 시공능력 등 모든 것을 시공회사 위주로 한데 묶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건물을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계의 비중은 너무 낮음으로 작품성을 보장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에서는 40여 년 전 아파트를 양산하려 할 때 또는 수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 '건축문화의 기틀인 창의성이 존중되지 않고 공산품처럼 단순건축물만을 양산하게 될 이런 제도 하에서는 건축대학이 필요 없으니 폐쇄하겠다'고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 정부방침을 철회시켰다고 한다. 최소한 기본 설계라도 현상에 의해 제시되어 그에 의한 공사가 되지 않는 한 이는 도식화된 건물을 양산할 뿐 문화적 측면에서 기념비적 건축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청계천 복원이 대통령후보군의 인기를 일거에 바꾼 점에서
정치인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는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정부의 PQ 턴키 BTL 사업에서 건축설계 방식을 독립시켜야 한다
일정 건축물은 청년건축사만의 참여로 미래의 동량을 키워야

둘째는 PQ제이다.

능력 있고 참신한 젊은 건축사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월등히 앞서는 대형사들의 PQ점수로 인해 그들은 참여의 길조차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PQ를 시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타당성이 있으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로서의 건축설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없어야 하지만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선진외국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이라도 젊은 건축사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건축 문화와 기술을 후학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미래의 동량을 키워내는 제도라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들은 대형사무소의 하청자로 전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BTL사업방식의 도입이다.

주관부서인 예산회계처에 의하면 3년간 전국적으로 문화, 복지, 집회, 체육시설은 물론 각급학교 등 복합시설을 BTL방식에 의거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만도 8조3천억의 예산 중 5조 이상이 건축에 책정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BTL사업은 민간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관리운영권을 받아 수익을 남기게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비수익성시설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민간 또한 투자처로서 매력력이 있어 넘쳐나는 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공사비와 관리비, 이자 등 완공 후 정부가 부담할 금액이 크며 이의 최종적인 부담은 국민의 세금에 의한다는 면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지 못하는 재정문제나 수익문제를 거론하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BTL방식으로 하더라도 설계만큼은 반드시 현상을 통하여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사가 제안서를 만들어 심사를 받자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영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11%가 BTL방식에 의한 것이고 일본이나 호주도 활성화되고 있다하지만 우리처럼 3년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조급함이나 건축설계에 대한 것을 금전적 논리로만 치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BTL의 원조격인 영국의 시행평가는 금전적 이익은 보았으나 작품성은 10% 이상 그 질이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은 건축설계비도 단독 설계 시 보다 평균 20% 적은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는데 반하여 업무량은 오히려 그보다 많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국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만큼 그 질이 더욱 떨어지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설계비의 보장책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거론한 세 가지 중 턴키제도와 BTL방식은 모두 건축설계의 비중이 낮고, 공사비절감을 위한 설계로 인하여 천편일률적인 건축물을 양산하게 되며, PQ방식은 모든 건축사의 참여를 봉쇄하는 불평등에 문제가 있다. 필자가 연초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건설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사와 지방건설사의 육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는 대형사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도 있는바 건축설계의 경우도 그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형평의 원칙상 설계는 그리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답변만을 담당관으로부터 들었다. 또한 BTL공사의 경우 현상공모를 통하여 작품

로펌과 같이 아키텍 펌을 만든 부산회원의 예는 전국에 확산시킬 만
매매부동산의 건축물 진단업무, 부동산협회와 원원전략으로 고려해봐야

회원은 과거의 안주를 그리워하지 말고 의식을 대전환해야 하고
협회는 3단계 협조 속에 회원 생존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을 선정한 후 그에 의한 BTL사업 진행을 타진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BTL사업이 설계, 시공, 자본의 3대 요소가 결합된 것인바 본 사업 시행
에 앞서 설계분야를 협회 와 논의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자 '다 찾아 왔는데 건축사협회만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사람이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였다. 참으로 답답한 대화였다.

작년 여름, 당시 BTL이란 단어가 생소할 때 지방회원 한분이 'BTL사업 때문에 그나마 교실 몇 칸씩 증축하는 설계조차도 못하게 생겼으니
협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실제로 금년도 사업 중 학교는 신축이 161개교, 개축이 104개교이다. 그런데 개축의 경우
금액에 맞추기 위해 교실 몇 칸씩 증개축하는 관내 학교들을 신축과 모두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 시
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와 대형화 속에서 날이 지고 샌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그 기업의 현실가치이고, 정보가치가 부의가치와 동일하다는 공식
이 보편화된 세상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형 마켓의 지방점포 개설은 인근의 중소점포들을 초토화시켜 지방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찬
반논쟁이 뜨겁게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건축설계업도 대형사들은 일이 넘쳐나 작은 일들은 쳐다보지 않으며 같은 건축사들에게 하청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1년에 단 한
건의 수주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IMF의 시작과 함께 건축사에게 있어 안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한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간다. 따라서 건축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 회원들처럼 서로 뭉쳐 변호사의 로펌과 같은 아키텍 펌을 만듦으로서 PQ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지자체 등
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의 수주를 하는 등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협회는 협회대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부동산 중개사협회와 논의하여 건물의 안전도 검사 등에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도 수수료가 기존 설계시장의 총수주금액과 같을 만큼 큰 시장이니 원원작전을 펼침으로서 회원의 생존을 위한 탈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어야 작품이나 건축문화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군과 적극적인 결속을 통한 지원도 얻어야 한다. 건축이 문화로서 대접 받지 못할 때엔 프랑스처럼 전국의 건축과 교수와 학회 등에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마인드이다. 건축을 공작물이 아닌 예술로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협회와 FIKA의 공동보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잠복해 있는 건설회사의 설계겸업 문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협정체결에 따른 설계시장의 잠식 등 내외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되는 시점에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의 의식전환과 함께 협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 ▮